

AI 대전환·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전력 인프라 확대

주요 부처 업무보고

**‘제1호 특구 짜르’ 지정해 규제 혁파
동반성장에 민간합동 5조 투입
‘전력감독원’ 내년 상반기 출범**

정부가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권역별 메가 특구를 조성하고, 전력·용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 **산업통상부, 메가특구법 제정… 127조 무역금융·제조 AX로 경제영토 확장**
산업통상부는 ‘조성장+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모토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제조업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중 권역별 성장엔진 3~4개를 확정 한 뒤, 300여 개 규제특례와 보조금이 담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후에는 ‘제1호 메가특구·짜르(Tzar)’를 지정해 인허가 통합 조정과 규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를 본격화한다. 재정·세제·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투입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 공급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제조업 AI 대전환(AX)도 가속화한다. ‘첨단 AI 팩토리’를 늘리고 휴먼노이드로봇 실증 및 6대 제조AI 표준을 개발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주 회사의 규제(중소회사 의무지분율 100%→50%)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한다.

전략금융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고,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해 공세적 통상협상에 나선다. 동반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민간 합동 5조원

을 투자하며,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재생E 100GW·물 10억t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대전환과 첨단 산단을 뒷받침할 ‘전기국가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물 기반시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한다. 해상풍력 25GW 확보를 위한 윈스톱 인허가도 가동된다. 원전 26기의 안정 운영 및 S

MR 검토와 함께, 전력계통 관리를 전담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내년 상반기 출범시킨다.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지방 이전을 위해 분산특구를 지정하고 서해안 HVDC 등 용통선로를 다각화한다. 2029년까지 2.3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구축한다.

반도체 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발전용·농업용 댐을 연계 관리해 가용 수자원 10억 4,000만t을 추가 확보한다. 국가 하천에는 AI CCTV를 배치해 실시간 홍수 방어망을 구축하고, 탄소다배출 5대 업종의 그린 전환(GX)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착을 이끈다.

◆ **공정위, 기술탈취 직권조사 확대… 과징금 재원 ‘피해구제기금’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술보호 감시관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피해구제 체계를 선진화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영업정지뿐 아니라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도입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구조적으로 담합에 취약한 개별적 특성에 맞춰 보완적 시정조치 톨을 만들어 놓는 차원”이라고 설

명했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전속고발권을 부분 개편해 국민·지자체의 직접 고발권을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에는 갑을 3법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 **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869만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869만명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제공자를 포용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종합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이다. 교섭권 침해 우려에 대해 권장준 노동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교섭 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2월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진제’를 패키지로 연내 입법 추진한다.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고위험 재해 반북 기업 183곳을 밀착 관리하며, 중대재해 위험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보장한다. 건설·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한다. 청년층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을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유족 없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기업 성과급 지침(8월 발표)을 통해 노사 갈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기부, 하반기 혁신창업가 1만명 키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목표
벤처→중견→글로벌 경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2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혁신 창업가 1만명을 선발한다. 상반기에 ‘창업도시’ 4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해 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 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 단체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4일 오후 하반기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선발 규모를 1차의 5000명보다 두배 늘린다. 이를 위해 신청 대상도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에서 ‘7년 이내 재창업’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4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을 창업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해 6곳을 추가, 총 10개 지역에 창업 인프라·문화를 조성해 창업 열기를 확산한다.

신안보(국방부·방사청), 제약바이오(복지부), 기후 테크(기후부), K-소비재(복지부·식약처), 인공지능(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타부처와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관련 분야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해 성장을 돕는다.

벤처기업→중견기업→글로벌 유니콘 성장 경로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등 벤처기업 특례 유지를 위한 벤처기업법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

한국·인도 정상간 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 인도 뉴델리 인근에 중소기업 진출거점인 가칭 ‘K-중기마루’를 추가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중기업·소기업 39만개 사 상위 1%인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키운다.

/김승호 기자 bada@

산업인력공단, KT와 AX 인재 양성 협력

공공기관 AI 전환 가속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KT와 ‘임직원 AI(인공지능) 역량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임직원의 AI 역량이 기초소양, 즉 ‘AI 리터러시’ 수준에 머물러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의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단은 직원이 AI를 실제 직무에 적용해 성과를 내는 실무형 AI 역량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조직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울산 중구 소재의 공단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단 기획운영이사과 KT 동부법인과 고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AI 교육부터 자격 취득, 직무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중장기 AX 역량 강화 ▲직무 맞춤형 교육 기획 ▲교육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개인의 AI 역량이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역량으로 축적되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 과제를 함께 발굴·적용한다. 또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모델 ‘밀:음(Mid:uum)’과 AI 고객센터(AICC), AI 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보유한 AI 전문기업으로, 경기도청·대법원 등 공공부문 AI 도입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해운·물류 혁신기업 발굴

‘1876 Busan’ 입주기업 모집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물은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2022년부터 해운항만 기술 혁신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인 ‘1876 Busan’을 운영해 왔다. 현재 12개의 창업기업을 지원 중이다.

입주기업을 선발해, 해운항만 분야에서 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고 공사는 밝혔



부산역 인근에 자리한 창업지원 플랫폼 ‘1876 Busan’ /부산항만공사

다. 예비 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부터 약 3주간이다. 내부 서류심사를 거쳐 9월2일 대면평가를 진행해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유럽 간 K-푸드… aT, 수출 영토 넓힌다

‘한국형 팝업 편의점’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농식품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올해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베스트 K-푸드’ 사업과 연계돼 있다. 기능성·건강식품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aT는 이달 8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에서 K-농동식품을 주제로 ‘한국형 팝업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측전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넥스트 K-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선정기업인 지엠에프(GMF)·루에랑(Lou et Lang)과 함께, 파리 교외의 마시 지역 소재 까르푸 매장에서 한국산 냉동식품을 선보인다.

매장 입구에는 한국편의점에서 착안한



프랑스 마시지역 까르푸 매장에 진열된 한국산 냉동식품 /aT

공간을 조성하고 냉동 쇼케이스와 진열대도 배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